

| 이슈페이퍼 2019-10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 및 과제 : 정책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박창현

1. 문제제기
 2.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3.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4. 나가며
- 참고문헌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 및 과제 : 정책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박창현 부연구위원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도출한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 우선,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회계 및 재정’에서는 ‘유치원 재무회 계규칙의 미이행’이, ‘교원정책’에서는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이, ‘운영관리’에서는 ‘조직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회계 및 재정’에서는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가, ‘교원정책’에서는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의 강화’가, ‘운영관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등이 정책우선순위였음.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로는 ‘공영형 유치원’ 모델이 정책 우선순위였음. ‘공영형’, ‘협동 조합형’, ‘일반형(현행)’ 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이,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 전환’과 ‘감정 평가시 평균 감정비 및 기타요인으로 매입가 결정’이,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는 ‘지침의 명확화’가 정책우선순위로 나타났음. 추가적으로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은 ‘에듀파인 도입’이 정책우선순위였음.
- 정책과제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립 교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고용 안정성 강화, 법인화 정책에 기반한 유아학교 기초 시스템 구축,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안착 및 현실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본 고의 전문가의견조사 분석결과는 「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김진석(2019).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충남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의 전문가 의견조사 중,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유치원 운영모델 다양화 정책’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1

문제제기

■ 2018년 10월 한유총 사태¹⁾는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인지, '학교'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유치원의 공공성에 관한 화두를 이끌어 내었으며,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제안되었음.

- 사립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상 '학교'임에도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경영권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사성(the private)'과 학교로서의 '공공성(the public)'이 혼재하고 충돌해왔음.

- 이에 한유총 및 자유한국당은 '시설사용료', '분리회계', '법인 유치원 통합회계' 등의 유치원법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여당 및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에듀파인 도입'을 비롯한 '보조금 횡령시 처벌조항 강화', '학교급식법 적용' 등의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작년 한유총 사태 이후, 정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조한 기본 계획인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제시하였음.

- 이 방안에서는 국공립 40% 조기 달성 정책과 함께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강화',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다양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핵심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 주로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았음.
- ◆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경우, '회계 및 재정', '교원정

1) 2018년 10월 5일, 한유총(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박용진 의원 주최 '비리 유치원 근절 정책토론회' 방해사건

책',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로는 '공영형', '협동조합형', '일반형' 유치원(현행)과 퇴로 모델인 '매입형' 유치원과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정책을 다루었음. 현재 실행 모델은 아니나, 향후 정책을 고려하여 가상의 모델인 '법인화형2)', '준공영형'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화를 전제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임.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모델임.
 -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은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 등에 발생한 입증 가능한 부채를 인수하거나, 총 납입액 대비 약 15~20% 용자상환금을 허용하는 모델임. '준공영형' 모델은 사인이 법인화를 전제하지 않고도(기존의 법인 포함) 공공성 지표를 충족할 때, 재정지원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임.

2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가.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9명을 선정하여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가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질적 조사, 2차 조사에서는 양적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음.
- 통계량으로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성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 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 등을 사용하였음.
- 중요도와 필요도, CVR을 교차하여 LFF(Locus for Focus)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음.

2) '법인화형'과 '준공영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연구진이 설정한 가상의 모델임.

나. 연구결과

■ 사립 유치원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 ‘사립 유치원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교원정책(4.26)’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회계 및 재정(4.16)’, ‘운영관리(4.09)’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표 1〉 ‘사립 유치원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회계 및 재정	4.16	0.85	14.86	0.56
교원정책	4.26	0.81	15.8	0.66
운영관리	4.09	1.02	13.83	0.46
전체	4.17	0.89	14.83	0.56

◆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

-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4.53)’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4.42)’, ‘행정지원인력 부족(4.37)’, ‘유치원 운영자의 유치원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이해 부족(4.21)’ 순이었음.
-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에서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 ‘유치원 운영자의 유치원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이해 부족’의 중요도와 CVR이 높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반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족(감사 및 규제)(4.05)’와 ‘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 미인정(3.37)’은 CVR이 0.43을 넘지 못해 타당하지 않았음.

〈표 2〉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	4.53	.61	18	0.89
국가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부재	4.16	.76	15	0.58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	4.42	.69	17	0.79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족(감사 및 규제)*	4.05	.97	13	0.37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행정지원인력 부족	4.37	.90	14	0.47
유치원 운영자의 유치원 회계 및 재정제에 관한 이해 부족	4.21	.85	16	0.68
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 미인정*	3.37	1.16	11	0.16
전체	4.16	0.85	14.86	0.56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교원정책의 문제점

- ‘교원정책의 문제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4.6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시스템 비체계화(4.32)’, ‘교사 인력풀의 사유화(4.16)’ 순으로 나타났음.
- ‘교원정책의 문제점’에서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시스템 비체계화’가 정책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립 교원 채용의 비공개성’, ‘교사 인력풀의 사유화’, ‘정부당국의 관리감독(감사 및 규제) 부족’은 모두 중요도와 CVR이 낮아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남.

〈표 3〉 ‘교원정책의 문제점’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사립 교원 채용의 비공개성	4.11	.81	14	0.47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	4.63	.50	19	1.00
교사 인력풀의 사유화	4.16	.76	15	0.58
정부당국의 관리감독(감사 및 규제) 부족	4.11	1.05	14	0.47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시스템 비체계화	4.32	.95	17	0.79
전체	4.27	0.81	15.80	0.66

◆ 운영관리의 문제점

- ‘운영관리의 문제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4.3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인 운영(4.32)’, ‘가족, 친인척 경영(4.26)’,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실운영(4.00)’ 순이었음. 반면, ‘교원단체 및 노조의 역할 부재(3.68)’, ‘급식운영 시스템 부재(3.89)’는 CVR이 각각 0.16, 0.37로 CVR이

0.43을 넘지 못해 타당하지 않았음.

- ‘운영관리의 문제점’의 하위요인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 ‘사인 운영’, ‘가족, 친인척 경영’이 중요도와 CVR이 높아 정책우선순위가 높았음. ‘교원단체 및 노조의 역할 부재’, ‘급식운영 시스템 부재’는 중요도와 CVR이 낮아 정책순위가 낮았음.

〈표 4〉 ‘운영관리 문제점’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	4.37	.76	16	0.68
가족, 친인척 경영	4.26	.87	14	0.47
사인 운영	4.32	.95	15	0.58
교원단체 및 노조의 역할 부재*	3.68	1.20	11	0.16
급식운영 시스템 부재*	3.89	1.24	13	0.37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실운영	4.00	1.11	14	0.47
전체	4.09	1.02	13.83	0.46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

-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강화’가 4.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4.63)’, ‘에듀파인 정착(4.58)’ 순이었음. 필요도에서는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강화(4.6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에듀파인 정착(4.47)’,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4.42)’ 순이었음.
-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에 대해서만 중요도의 점수가 필요도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남($p < .05$).
-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필요도를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강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에듀파인 정착’, ‘법인화를 통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아 정책우선순위로 나타났음. 반면, ‘무상교육비 확대(누리과정비 인상)’, ‘일반형 유치원의 운영 건전성을 등급화하여 차등지원’, ‘원비인상률상한제 폐지’는 중요도와 필요도 모두 낮아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났음.

〈표 5〉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의 중요도와 필요도 평균 및 표준편차(N=19)

항목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요도-에듀파인 정착	4.58	.84	.19
필요도-에듀파인 정착	4.47	.90	.21
중요도_감사/지도점검 강화	4.26	.73	.17
필요도_감사/지도점검 강화	4.11	.94	.21
중요도-무상교육비 확대(누리과정비 인상)	4.05	.78	.18
필요도-무상교육비 확대(누리과정비 인상)	3.89	.74	.17
중요도-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4.63	.76	.17
필요도-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4.42	.90	.21
중요도-법인화를 통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4.32	1.00	.23
필요도-법인화를 통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4.21	1.13	.26
중요도-행정지원인력 지원 강화	4.16	1.01	.23
필요도-행정지원인력 지원 강화	4.16	.76	.18
중요도-일반형 유치원의 운영건전성을 등급화하여 차등지원	3.89	.88	.20
필요도-일반형 유치원의 운영건전성을 등급화하여 차등지원	3.95	.85	.19
중요도-원비인상률상한제 폐지	3.16	1.64	.38
필요도-원비인상률상한제 폐지	3.00	1.49	.34
중요도-유치원회계 목적의 사용금지 강화	4.84	.50	.12
필요도-유치원회계 목적의 사용금지 강화	4.63	.60	.14

◆ 교사정책 개선방안

- ‘교사정책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가 4.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4.63)’, ‘교사 인력풀 지역수준의 공공화 방안(4.53)’ 순이었다. 필요도는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가 4.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4.47)’, ‘국공립수준의 교사 임금 향상(4.47)’ 순이었음.
- ‘교사정책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개 채용 시스템 강화(외부인사 및 임용절차 공개성)’과 ‘지역교육청-사립 유치원의 교사 공동선발 체제 도입’의 경우에만, 중요도와 필요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 < .05$).

- ‘교사정책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필요도를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 ‘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 ‘국공립 수준의 교사 임금 향상’, ‘원장 급여의 최대-최소기준 마련’, ‘교사 인력풀 지역수준의 공공화 방안’의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반면 ‘지역교육청-사립유치원의 교사 공동선발 체제 도입’과 ‘교사 노조 인정’은 정책의 중요도와 요구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6〉 ‘교사정책 개선방안’의 중요도와 필요도 평균 및 표준편차(N=19)

항목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요도-공개채용 시스템 강화(외부인사 및 임용절차 공개성)	4.42	.61	.14
필요도-공개채용 시스템 강화(외부인사 및 임용절차 공개성)	4.16	.76	.18
중요도-지역교육청-사립 유치원의 교사 공동선발 체제 도입	4.21	.79	.18
필요도-지역교육청-사립 유치원의 교사 공동선발 체제 도입	3.89	.99	.23
중요도-원장 급여의 최대-최소기준 마련	4.47	.61	.14
필요도-원장 급여의 최대-최소기준 마련	4.42	.69	.16
중요도-교사 인력풀 지역수준의 공공화 방안	4.53	.61	.14
필요도-교사 인력풀 지역수준의 공공화 방안	4.32	.58	.13
중요도-교사 인건비 정부 전액 지원	4.37	1.01	.23
필요도-교사 인건비 정부 전액 지원	4.21	.79	.18
중요도-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4.37	.76	.17
필요도-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4.37	.83	.19
중요도-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	4.63	.60	.14
필요도-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	4.47	.70	.16
중요도-국공립 수준의 교사 임금 향상	4.47	1.02	.23
필요도-국공립 수준의 교사 임금 향상	4.47	.77	.18
중요도-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	4.68	.58	.13
필요도-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	4.63	.60	.14
중요도-교사 노조 인정	3.58	1.35	.31
필요도-교사 노조 인정	3.58	1.39	.32
중요도-사립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NIES 시스템 구축	4.37	1.01	.23
필요도-사립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NIES 시스템 구축	4.21	1.18	.27

◆ 운영관리 개선방안

- ‘운영관리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4.32)’, ‘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4.16)’,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3.89)’ 순이었음. 필요도에서는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4.00)’,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3.68)’ 순이었음.
- ‘운영관리 개선방안’의 하위요소별 전문가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개선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도를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가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학제개편을 통한 4,5세 의무교육체제 전환’, ‘유치원 평가와 정보고시를 재정지원과 연결 지어 차등지원’은 중요도와 필요도 수준이 모두 낮아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남.

〈표 7〉 ‘운영관리 개선방안’의 중요도와 필요도 평균 및 표준편차(N=19)

항목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요도-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	4.16	.83	.19
필요성-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	4.00	1.15	.26
중요도-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3.89	1.05	.24
필요성-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3.68	1.11	.25
중요도-유치원 평가와 정보고시를 재정지원과 연결 지어 차등지원	3.37	1.26	.29
필요성-유치원 평가와 정보고시를 재정지원과 연결 지어 차등지원	3.42	1.26	.29
중요도-유아학교로 명칭변경	4.32	1.00	.23
필요성-유아학교로 명칭변경	4.26	.87	.20
중요도-학제개편을 통한 4,5세 의무교육체제 전환	3.89	1.05	.24
필요성-학제개편을 통한 4,5세 의무교육체제 전환	3.68	.95	.22
중요도-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4.47	.70	.16
필요성-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4.26	.81	.18

■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영형 유치원’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4.31), ‘협동조합형 유치원(4.22)’,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4.18),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4.16)’, ‘일반형 유치원(현행)’(4.09), ‘매입형 유치원(4.09)’ 순이었음.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에 대한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유치원 모델은 ‘공영형 유치원’,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 ‘협동조합형 유치원’이었다. 반면,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았던 유형은 ‘일반형 유치원’,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 ‘매입형 유치원’,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였음.

〈표 8〉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공영형 유치원	4.32	0.83	16.13	0.70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	4.18	0.73	15.25	0.61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	4.31	0.83	16.60	0.75
일반형 유치원(현행)	4.09	0.91	14.25	0.50
협동조합형 유치원	4.22	1.08	15.80	0.66
매입형 유치원	4.09	1.07	15.20	0.60
유치원 용도 변경 및 양도양수	4.16	1.14	14.50	0.53
전체	4.20	0.94	15.39	0.62

◆ 공영형 유치원

- ‘공영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에듀파인 적용’의 중요도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로 적용(4.68)’, ‘법인이사회의 경우, 유아관련 외부인사 2명 이상 개방 이사를 추가하기 어려운 대학부설, 종교부설 유치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구성(4.42)’, ‘재정지원 3년 후 성과평가 및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연속성 결정(4.36)’,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4.32)’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세금전액 면제(3.84)’는 CVR이 0.26

으로 타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 ‘공영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듀파인 적용’, ‘처음학교로 적용’이 중요도와 CVR이 모두 높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음. 반면, ‘세금전액 면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국가 유치원 수준의 운영비 보조’, ‘사인의 학교 법인화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면제’는 중요도와 CVR이 낮아 정책순위가 낮았음.

〈표 9〉 ‘공영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4.32	1.00	16	0.68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국가 유치원 수준의 운영비 보조	4.21	.92	15	0.58
재정지원 3년후 성과평가 및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연속성 결정	4.36	.82	17	0.79
에듀파인 적용	4.74	.45	19	1.00
처음학교로 적용	4.68	.48	19	1.00
법인이사회의 경우, 유아관련 외부인사 2명 이상 개방이사를 추가하기 어려운 대학부설, 종교부설 유치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구성	4.42	.90	16	0.68
사인의 학교 법인화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 면제	4.05	1.02	15	0.58
세금전액 면제*	3.84	1.07	12	0.26
전체	4.33	0.83	16.13	0.70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

-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에듀파인 적용’과 ‘처음학교로 적용’이 평균 4.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인 유치원 법인화 유도(4.58)’, ‘교사 인건비 지원(4.47)’ 순이었음. 반면, ‘유치원 자산의 법인 인수 시 설립비, 기타 자산 및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한, 입증 가능한 부채 수용(3.68)’, ‘유인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면제(3.84)’, ‘유인책으로 금융기관 또는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법인에 대한 융자 허용 (총 납입액 대비 약 15~20%의 융자상환금 허용)(3.74)’, ‘세금전액 면제’는 CVR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에 대한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음학교로 적용’, ‘에듀파인 적용’, ‘사인 유치원 법인화 유도’, ‘교사 인건비 지

원'은 중요도와 CVR이 모두 높아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남. 반면, '유인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면제', '유인책으로 금융기관 또는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법인에 대한 융자 허용 (총 납입액 대비 약 15~20%의 융자상환금 허용)', '유치원 자산의 법인 인수 시 설립비, 기타 자산 및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한, 입증 가능한 부채 수용', '세금 전액 면제'는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아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남.

〈표 10〉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4.58	.51	19	1.00
유치원 자산의 법인 인수 시 설립비, 기타 자산 및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한, 입증 가능한 부채 수용*	3.68	.82	13	0.37
에듀파인 적용	4.68	.48	19	1.00
처음학교로 적용	4.68	.48	19	1.00
유인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면제*	3.84	.96	13	0.37
유인책으로 금융기관 또는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법인에 대한 융자 허용 (총 납입액 대비 약 15~20%의 융자상환금 허용)*	3.74	.87	13	0.37
교사 인건비 지원	4.47	.77	16	0.68
세금전액 면제*	3.74	.93	10	0.05
전체	4.18	0.73	15.25	0.61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

-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에듀파인 적용'이 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처음학교로 적용(4.69)', '지역교육청별 사회배려 계층 및 취약지구 유치원 우선 고려(4.37)', '공공성 지표 충족 시 교사 인건비 우선 지원(4.26)' 순으로 나타남. 반면, '사인의 경우 학교 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기간 이후 재산권 보장(3.42)'은 CVR이 0.16으로 낮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에 대한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듀파인 적용'과 '처음학교로 적용'이 중요도와 CVR이 높아 정책순위가 높게 나타남. 반면, '사인의 경우 학교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기간 이후 재산권

보장'은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게 나타남.

〈표 11〉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사인의 경우 학교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기간 이후 재산권 보장*	3.42	1.35	11	0.16
공공성지표 충족시 교사 인건비 우선 지원	4.26	.81	17	0.79
에듀파인 적용	4.79	.42	19	1.00
처음학교로 적용	4.69	.48	19	1.00
지역교육청별 사회배려 계층 및 취약지구 유치원 우선 고려	4.37	1.11	17	0.79
전체	4.31	0.83	16.60	0.75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형 유치원(현행)

- '일반형 유치원(현행)'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에듀파인 적용'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처음학교로 적용(4.21)', '추후 재정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4.00)' 순이었음. 반면, '현행과 같이 전체 운영비의 45% 수준의 재정지원(3.74)'의 경우 CVR이 0.26으로 낮아 타당하지 않았음.
- '일반형 유치원(현행)'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듀파인 적용'만이 정책순위가 높은 요소로 나타남. 반면, '현행과 같이 전체 운영비의 45% 수준의 재정지원'은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았음.

〈표 12〉 '일반형 유치원(현행)'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현행과 같이 전체 운영비의 45% 수준의 재정지원*	3.74	.93	12	0.26
추후 재정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	4.00	.94	15	0.58
에듀파인 적용	4.42	.77	16	0.68
처음학교로 적용	4.21	.98	14	0.47
전체	4.09	0.91	14.25	0.50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에듀파인 적용’의 중요도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처음학교로 적용(4.32)’, ‘공공기관에 임대 형태로 운영(비영리법인)(4.16)’로 운영 순이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결과, ‘에듀파인 적용’만이 중요도와 CVR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 정책의 우선순위 가장 높았음. 반면, ‘공공기관에 임대 형태로 운영(비영리법인)’은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아 정책순위가 낮았음.

〈표 1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공공기관에 임대 형태로 운영(비영리법인)	4.16	1.17	15	0.58
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4.12	.937	14	0.47
에듀파인 적용	4.42	1.02	17	0.79
처음학교로 적용	4.32	1.06	16	0.68
설립 후, 공영형 유치원 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4.11	1.20	17	0.79
전체	4.23	1.08	15.80	0.66

◆ 매입형 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국공립으로의 전환’이 4.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비 및 기타 요인으로 매입가 결정(4.21)’, ‘국공립 전환 시 사립 교원 승계가 어려우므로 사립 교원의 고용 안정성 고려(4.10)’,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 유치원의 기본 재산(토지 및 건물) 인수(4.05)’ 순으로 나타남.
-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으로의 전환’과 ‘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비 및 기타 요인으로 매입가 결정’이 중요도와 CVR이 모두 높아 정책순위가 높게 나타남. 반면, ‘단기 매입이 어려울 경우, 장기 임대 후 매입’은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게 나타남.

〈표 14〉 ‘매입형 유치원’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 유치원의 기본 재산(토지 및 건물) 인수	4.05	1.22	15	0.58
국공립으로의 전환	4.26	1.15	16	0.68
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비 및 기타 요인으로 매입가 결정	4.21	.71	16	0.68
단기 매입이 어려울 경우, 장기 임대 후 매입	3.84	1.12	14	0.47
국공립 전환 시 사립 교원 승계가 어려우므로 사립 교원의 고용 안정성 고려	4.10	1.15	15	0.58
전체	4.09	1.07	15.20	0.60

◆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하위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는 4.68로 매우 높았으나,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는 평균이 3.63로 낮았음. CVR도 0.16으로 타당하지 않음.
-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하위요소별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LFF 분석 결과에서도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는 중요도 평균과 CVR이 높아 정책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하위요소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및 CVR

항목	평균	표준편차	Ne	CVR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	3.63	1.54	11.00	0.16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	4.68	.75	18.00	0.89
전체	4.16	1.15	14.50	0.53

주: 1) * 표시 항목은 CVR이 0.43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은 항목임.

2) Lawshe(1975)에 따라 표본 수 19명에 해당하는 0.43의 기준을 적용함.

다. 소결

■ 사립 유치원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으로는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부족(감사 및 규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교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사립

교원 채용의 비공개성' 등은 정책순위가 낮았음.

- '운영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이 가장 높았으며, '교원 단체 및 노조의 역할 부재' 등은 정책순위가 낮았음.

■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회계 및 재정 개선방안'에서는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이 현재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무상 교육비 확대(누리과정비 인상)' 등은 정책 순위가 낮게 나타났음.
- '교원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교육청-사립유치원의 교사 공동선발 체제 도입' 등은 정책순위가 낮았음.
- '운영관리 개선방안'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았으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등은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남.

■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준공영형 유치원', '협동조합형유치원', '법인화형 유치원',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일반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순이었음. 중요도와 CVR이 모두 낮았던 유형은 '일반형 유치원',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 '매입형 유치원',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였음.
-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적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금전액 면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적용'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에 임대 형태로 운영(비영리법인)'은 정책순위가 낮았음.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으로의 전환'과 '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비 및 기타 요인으로 매입가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단기매입이 어려울 경우, 장기임대 후 매입'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
- '일반형 유치원(현행)'의 '에듀파인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현행과 같이 전체 운영비의 45% 수준의 재정지원'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음.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의 경우,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 추가적으로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은 ‘에듀파인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사인’의 경우 학교 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기간 이후 재산권 보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은 ‘에듀파인 적용’과 ‘처음학교로 적용’이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 자산의 법인 인수 시 설립비, 기타자산 및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한, 입증 가능한 부채 수용’ 등은 타당하지 않았음.

3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가. 정책쟁점

■ 이슈 1: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회계 및 재정 정책의 안착

- 전문가들은 회계 및 재정의 문제점으로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과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을 중요하게 보았음.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의 전환’도 중요하게 보았으므로, ‘추후 법인화를 통한 재정결합보조금으로의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상의 내용은 유치원 3법의 내용과 일치함.
- ‘현행 일반 유치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운영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나, ‘무상교육비 확대’, ‘원비인상률상한제 폐지 정책’은 우선순위를 낮게 평가하였음. 이는 전문가들이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기제 확립을 더 중요하게 본 결과로 판단됨.
- 반면 ‘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의 미인정’,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부족’은 타당하지 않게 인식하였음. 이는 전문가들이 사립 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 결과로 판단됨.

■ 이슈 2: 사립 교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교원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강화’,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시스템 비체계화’, ‘교사 고용 안정성 강화(정년보장, 대체인력 지원 등)’, ‘교사 인력풀 지역수준의 공공화 방안’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는 사립 교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사립 교원은 전문직이나, 노동자성도 가지고 있음. 이에 주 52시간 제도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 및 교원의 노동조건 향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교사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우선순위는 아니었으나, 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추후 노조의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등에 대한 근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사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함. 또한 사립 교원의 인력풀도 지역수준으로 공공화하여, 공개채용과 배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양질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이슈 3: ‘유아학교’, ‘사인 진입 규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립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 운영관리의 경우, 전문가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신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사인 유치원 진입 규제’를 중요하게 보았음.
- 반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학제개편을 통한 4,5세 의무교육체제전환’, ‘유치원 평가와 정보고시를 재정지원과 연결 지어 차등지원’은 정책 순위가 낮았으나, 추후 고민이 필요한 정책들임.

■ 이슈 4: 공영형 유치원 제도 안착, 퇴로 모델도 고려

-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의 정책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퇴로 정책인 ‘매입형 유치원’이나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정책, ‘현행 일반 유치원’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순위가 낮게 나타남.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제대로 안착시켜 추후 의무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사립학교로서의 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음.
- 정책우선순위가 낮더라도 퇴로 정책인 ‘매입형 유치원’과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정책에 대해서도 추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치원 용도변경이나 양도양수 정책에서는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음.

■ 이슈 5: 모든 사립 유치원 모델에서 에듀파인 정책의 정착이 우선

- ‘공영형’, ‘협동조합형’, ‘일반형(현행)’ 유치원 모델에서 ‘에듀파인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므로, 추후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이행과 더불어 에듀파인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가상의 모델인 '준공영형 유치원'과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에듀파인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음. 그러나 '학교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재산권을 보장해주거나 설립 비용에서 발생한 부채를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추후 모델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과제

-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 에듀파인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사립 교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법인화 정책에 기반한 유아학교 기초 시스템 구축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안착 및 현실화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 퇴로 및 준공영형,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에 대한 추후 논의 필요

4

나가며

- 이상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이 현 시점에서 중요함.
-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정책과 함께,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등의 유치원 모델을 지역에 알맞게 현실화하여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의 장기적 감소와 인구 이동을 고려하여,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조절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 정책을 도입하되, 퇴로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사립 유치원의 특수성, 고유성,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함께 상생하고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치하는 유치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사립 유치원을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특히 재산권 문제로 인해 ‘법인화’를 어려워하는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을 위한 다각적인 공공성 강화 정책이 요구됨.

I 참고문헌 I

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김진석(2019).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충남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